

세계화, 또 하나의 '물신숭배'

세계화가 95년의 화두가 되고 있다. 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천명할 만큼 이 단어는 무슨 연호처럼 떠받들어지기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국제경쟁력 또는 국제화가 화두처럼 인구에 회자하더니 1년도 안돼 대통령의 선창에 따라 세계화가 국정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는 무엇이고 세계화는 무엇이나고 정부의 즉흥성을 꼬집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는 한국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생활 전분야의 최고가치로 단숨에 자리잡았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화'는 이 시대의 뚜렷한 징표임에 틀림없다. 경제분야에서 세계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현실이다. 또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동시적인 생활권으로 통합해 지구촌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게끔 만들어놓았다. 세계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통합돼 가고 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차츰 좁혀지고 있다.

세계화는 이처럼 객관적인 '현실'로서 존재하는 운동이다. 세계화의 추세를 냉철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문제는 세계화의 운동주체가 세계적인 거대자본이며 이 운동의 논리는 무한경쟁이라는 사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이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는 본질적으로 이런 세계 거대자본이 세계적 규모에서 자유롭게 자본축적운동을 할수 있도록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체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정의 최고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은 이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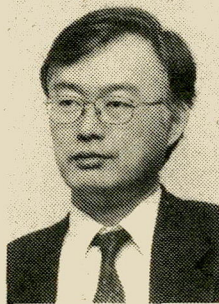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관련돼 있다.

최근 정부·언론·기업이 펼치는 논리의 처음과 끝은 세계화요 경쟁력 강화이다.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지 수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절대가치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사고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조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경제성장이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종속시키는 최고의 가치로 모셔졌듯이 지금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의 최정점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느낌이다. 또 하나의 허위의식·물신화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우리는 이미 기업의 경쟁력

편집국에서



박 우 정

편집부국장

경쟁력 강화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공정성과 형평의 원칙 및 공익 등 더 소중한 가치가 희생된 것이다. 이는 가치의 전도, 역사 발전의 역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화라는 최고가치를 위해 어떤 가치들이 유보되고 희생돼야만 할 것인가. 혹시 문화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주체성, 나아가 국가 주권 자체가 다음 차례는 아닐지 적이 우려되는 요즘이다.

세계화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하나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를 외치기 앞서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더욱 근본적인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당연히 국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 세계화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6월에 있을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기대해본다.

강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부가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벌이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공정거래나 독과점 행위에 관한 규제도 풀렸다. 반면 개발독재시대의 악법인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유보되거나 중단됐다.